



주얼리에스엘 사측 “퇴직금 받으려면 알아서 나가라”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 금속노조, 해고위협·사직 강요 중단 촉구

귀금속을 만드는 경기 안양 주얼리에스엘 노동자들이 사측의 해고위협과 사직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얼리에스엘 사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하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세종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사측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면서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얼리에스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9월 9일 주얼리에스엘 대표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왔다. 사측 대표는 그 자리에서 “회사가 어렵다. 퇴직금 줄 수 있을 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항의에도 사측은 11일 경영상 어려움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에 공지했다.

김세종 주얼리분회장은 “제목만 사과문이고 결국 사람들 자르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해고위협을 받은 주얼리에스엘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얼리에스엘 노동자들은 “사측이 경영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내쫓으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현 노조 동부지역지회장은 “사측에서 주장하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금을 분실해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단다”라며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회사 정상화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사측은 지난 9월 7차례에 걸쳐 사측 대표, 관리자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겼다고 주얼리분회에 전했다. 주얼리분회가 확인한 결과, 근로자위원은 간단

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로 알고 나갔다. 회의 공지는 받지 못했다. 이재현 동부지역지회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만 계속 쓴다”라고 지적했다.

9월 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이재현 지회장은 “사측에서 퇴직금 받으려면 지금 관둬라, 알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협박한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무엇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한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현 지회장은 사측에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정상화 방안 마련에 최우선으로 힘을 쏟길 바란다. 지금 사측이 할 일은 구조조정 추진이 아니다”라며 “사직 강요 등 불법행위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 살릴 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당사자들 “현대제철을 국정감사 하라”

시정명령·법원명령 이행안해 …“환노위, 현대제철 국감에 세워야”

금속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 현대제철부당인사저지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이 13년 만에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도 현대제철은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로 대법원 판결 당사자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교섭 요구에도 불응하며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불이행에 대해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오상민 현대제철부당인사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제철은 120명의 대법원 판결 당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자리를 자회사 계약직 노동자로 채웠

다”라며 “불법 경영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을 뿐,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오상민 위원장은 “행정부,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국회가 기업의 불법 행위까지 감싸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제철에게 똑똑히 보여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당진 5개 업체 11공정 749명, 순천 5개 업체 516명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119억 원도 행정소

송을 통해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한 하청업체들이 무허가 파견업체였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현대제철에 파견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하지 않았다.

무허가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현대제철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수순이 남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을 뿐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은 한술 더 떠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6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현대제철의 행태는 노동자들을 법대로 해도 안 된다는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며 “사법부 판결도 소용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현대제철의 불법을 외면한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혜경 의원을 통해 현대제철 증인채택 요구 서한을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했다.